

Premium Report 제20호
(2016. 3. 4)

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분석에 따른 시사점

 **KICI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**

작 성 자 : 김현진 연구원

내용문의 : T - (031) 231-3424 / dualion@kici.re.kr

- 정보통신공사업은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 뿌리산업으로써 스마트시대를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
 -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벗어나 인터넷 신산업 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여러 산업과의 융·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
- 공사업의 역할확대에 따라 실질적인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, 새로운 ICT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'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' 실시
 - 2011년부터 현재까지 업계 종사자들을 통해 설문과 방문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현안을 조사·분석하고 여러 쟁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
- 본 연구는 공사업의 시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, 나아가 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계속 수행됨
 -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내·외적 환경변화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공사업계의 대응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며, 나아가 국내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

2

실태조사 수행 방법

-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소속된 회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임의 추출 (random sampling) 후 온·오프라인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(In-depth interview)을 병행하여 진행

➢ 설문조사는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, 심층면접은 주요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각 지역에서 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대표자 및 임직원을 선정하여 인터뷰

구분	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
전체 모집단	8,502개 (2015. 8월 기준)
표본집단	4,000개 (약 47%)
회수율	54%
최종분석대상	2,145개

- 설문조사의 내용은 경영환경(1) 및 경기전망(6), 공사업관련 제도(18) 및 운영실태(14), 하도급(16), 기술개발 실태(13), 4대보험(8) 등으로 구성
- 심층면접은 공사업 적정업체수, 공사업 등록기준, 경영 전망, 기타 공사업 관련 현안사항에 관하여 질의 구성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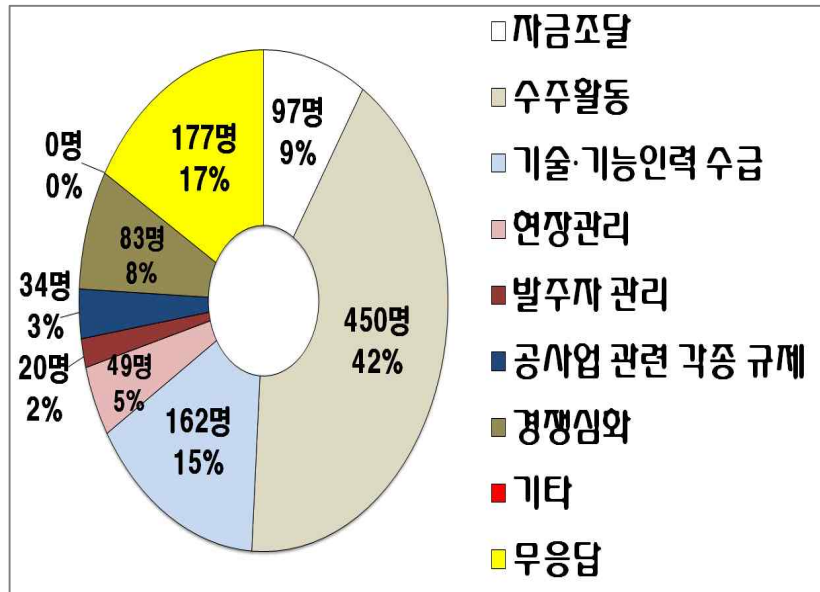
실태조사 분석 결과(1)

회사 개요 및 경영일반

경영일반

공사업 운영 어려운 점

- 조사결과 전체 설문업체 중 42% 해당하는 공사업체들이 '수주활동'을 공사업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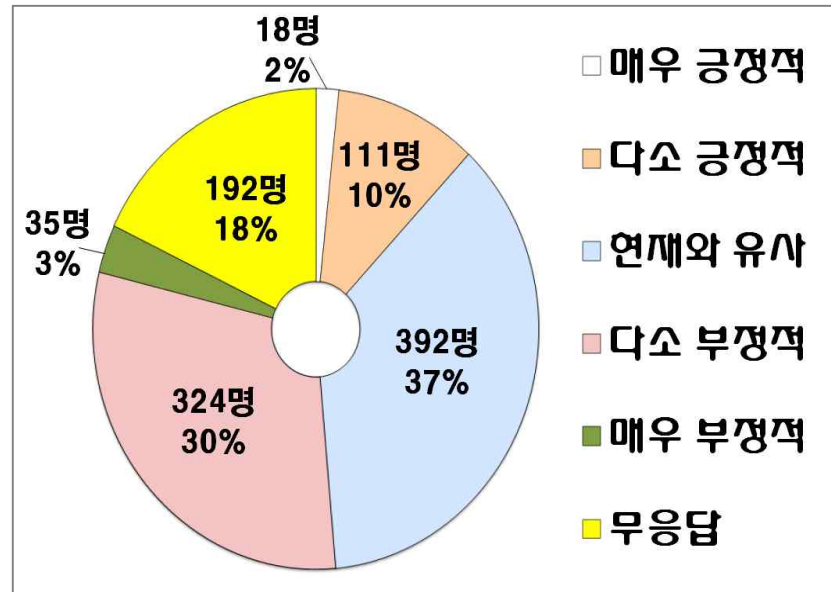


회사 개요 및 경영일반

경기전망

단기(2년) 공사업 경기전망

- 조사결과 '매우 부정적' 이거나 '다소 부정적' 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 33% 인 반면 '매우 긍정적', '다소 긍정적' 인 응답은 12%에 불과

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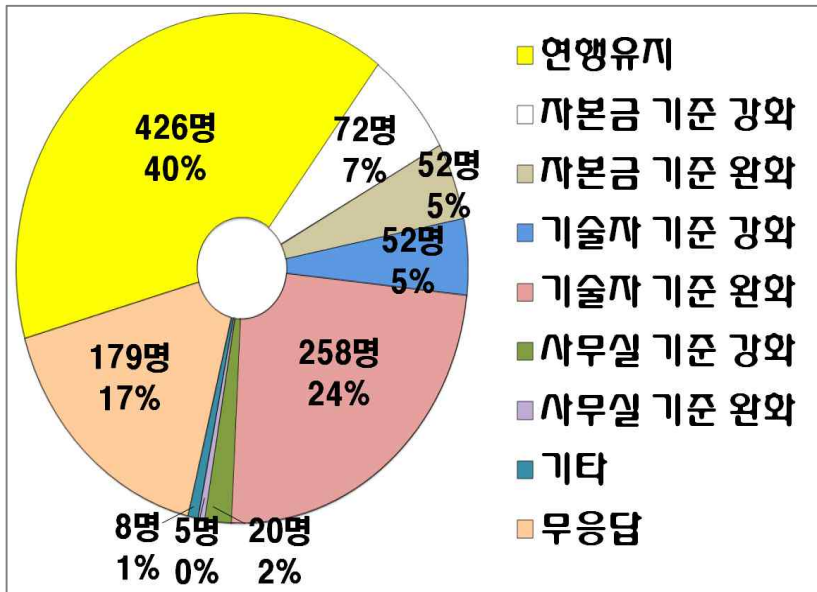
실태조사 분석 결과(2)

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제도

공사업 등록기준

등록기준 변경

- '현행유지'가 전체 응답업체 중 40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'기술자 기준 완화'가 24%, '자본금 기준 강화'가 7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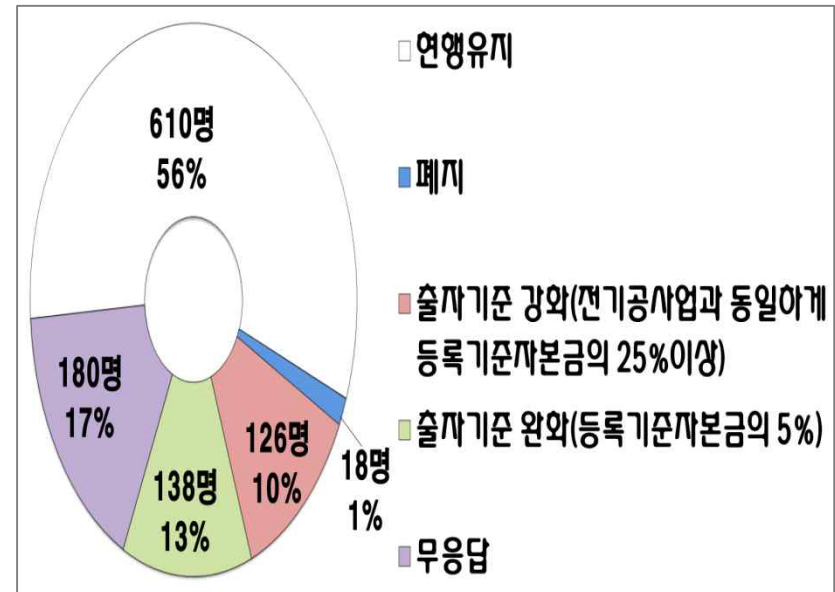


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제도

공사업 등록기준

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기준

- '현행 유지'가 전체 응답의 56%로 나타났으며 '출자기준 완화'로 응답한 업체는 13%, '출자 기준 강화'로 응답한 업체는 10%로 나타남

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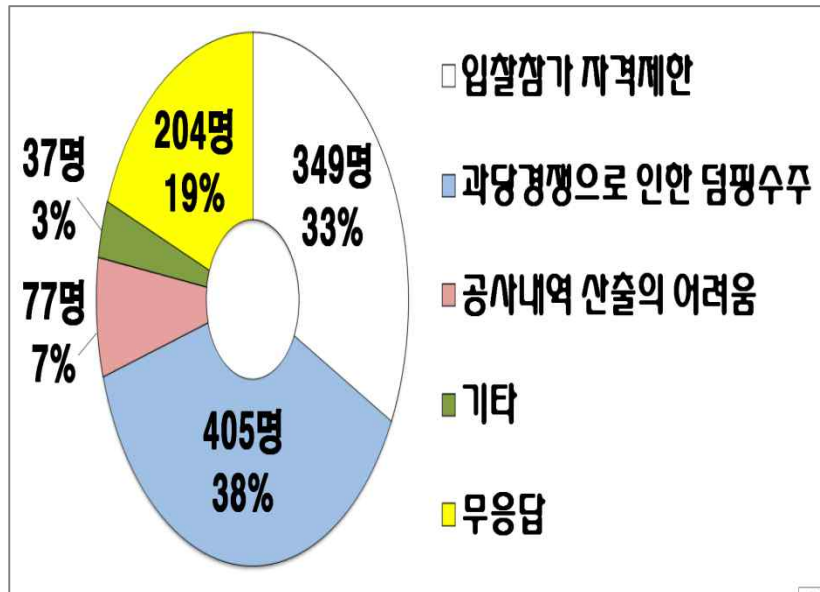
실태조사 분석 결과(3)

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제도

입찰방법 및 계약 제도

공사수주 시 어려운 점

- 과당경쟁으로 인한 덩핑수주가 어려운 점이라고 답한 업체가 38%를 나타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33%, 공사내역 산출의 어려움이 7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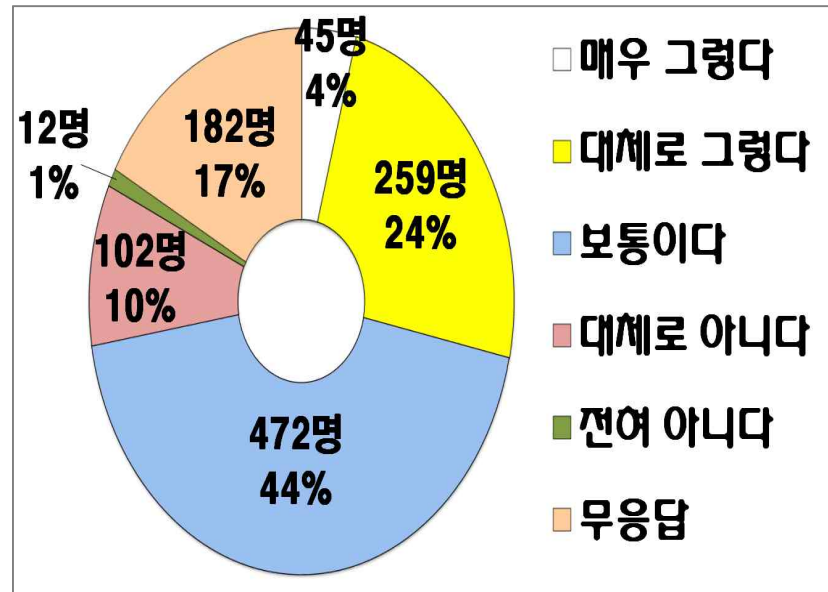


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제도

적정공사비 반영여부

공사수행시 적정원가 보상

- 전체 응답 업체 중 44%가 '보통이다' 라고 답하였으며, '대체로 그렇다' 가 24%, '대체로 아니다'가 10%, '매우 그렇다'가 4% 순으로 나타남

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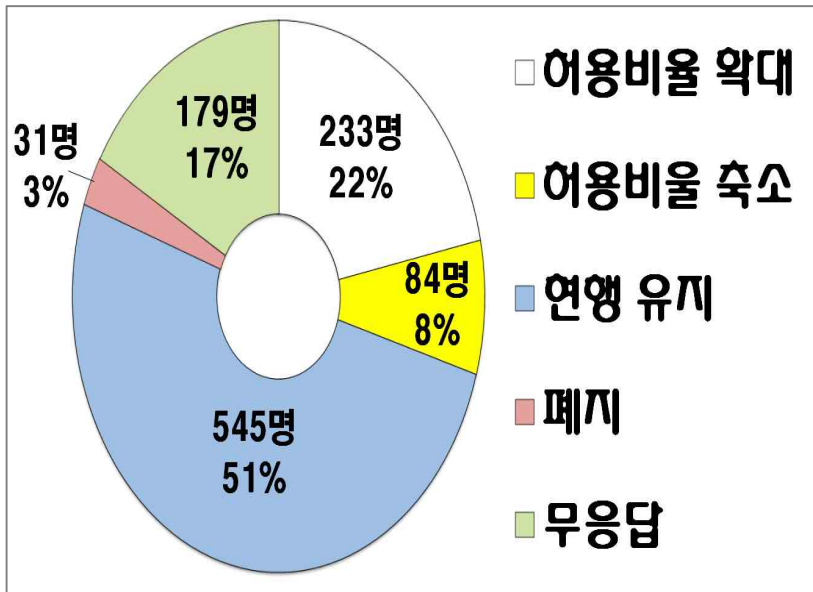
실태조사 분석 결과(4)

하도급 관련 실태

하도급 허용비율

허용비율 조정 관련

- 기존 50%미만으로 설정된 하도급 허용비율에 대해 '현행 유지' 로 응답한 업체는 전체 51%를 차지하였으며, '허용비율 확대' 가 22%, '허용비율 축소' 가 8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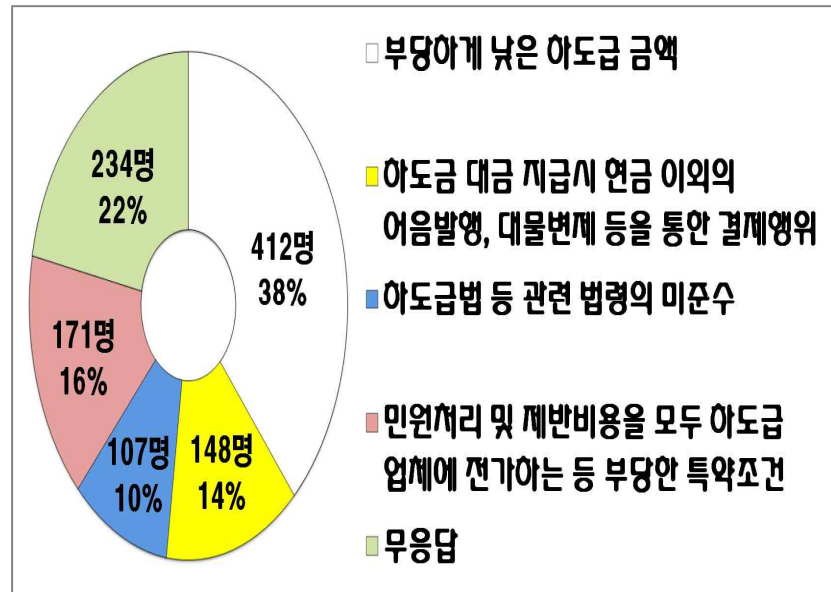


하도급 관련 실태

하도급 불공정 행위

개선 시급한 현안

- 조사 결과, '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금액' 을 응답한 업체는 38%로 가장 많았으며, 그 다음으로 '민원처리 및 제반 비용을 모두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등 부당한 특약조건' 이 16%를 차지

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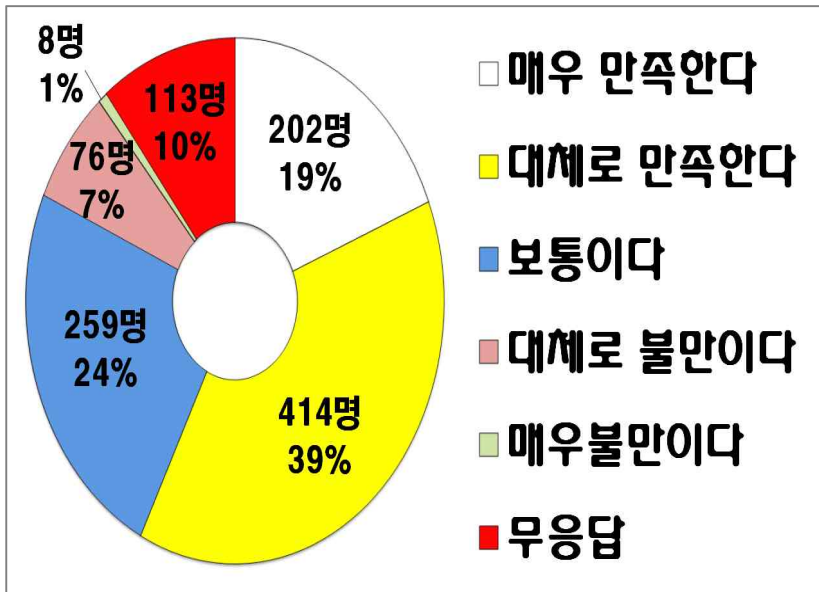
실태조사 분석 결과(5)

공사업체 보호 및 육성 관련 실태

공사업자 보호 · 육성 방안

제도와 시책 수준

- 조사 결과, '보통이다' 가 24%, '대체로 만족한다' 와 '매우 만족한다' 가 각각 39% 및 19%를 차지하였고, '대체로 불만이다' 가 7%, '매우 불만이다' 가 1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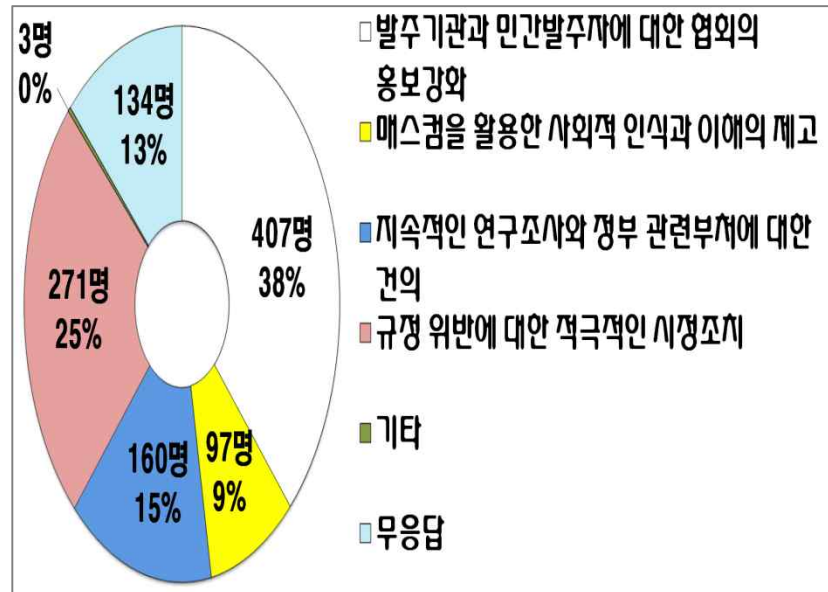


공사업체 보호 및 육성 관련 실태

분리발주제도

제도 지속 위한 필요사항

- 분리발주제도의 지속을 위해서는 '발주기관과 민간발주자에 대한 협회의 홍보강화가 필요하다' 는 응답이 전체의 38% 였으며, '규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' 가 25%를 차지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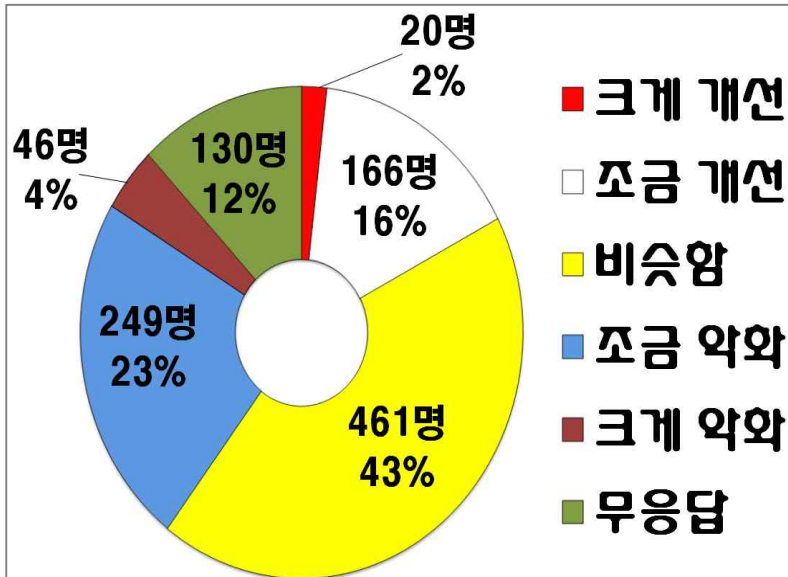
실태조사 분석 결과(6)

공사업 자금 관련 실태

자금 조달 관련

자금사정

- 전년대비 43%의 기업들이 '비슷함' 이라고 응답하였으며, '조금 악화' 가 23%, '조금 개선' 이 16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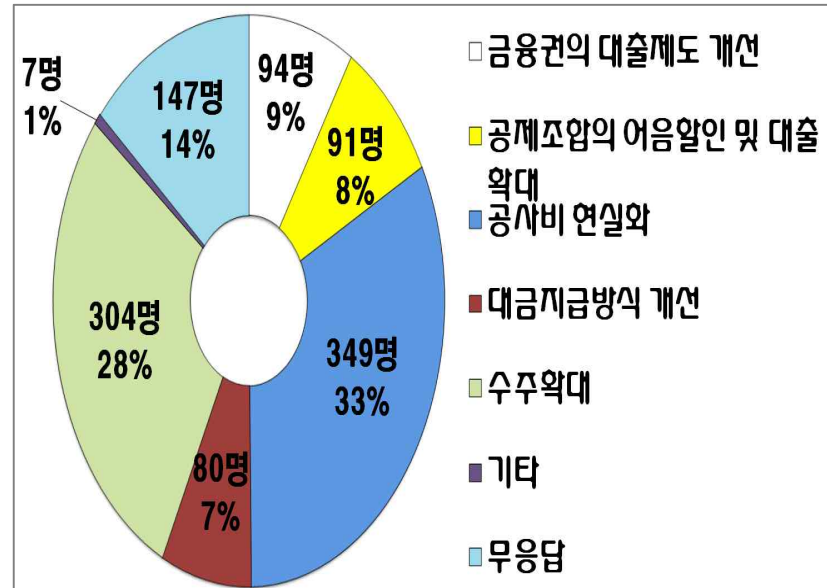


공사업 자금 관련 실태

자금 조달 관련

자금사정악화 해소 방안

- 자금악화의 해소방안 조사결과, '공사비 현실화' 가 33%, '수주확대' 28%, '금융권의 대출제도 개선' 9% 순으로 나타남.



가. 공사업 시장 내의 적정업체수

- ▷ 공사업 시장 내의 적정업체수에 관한 질문에서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공사업체들이 공사업체수가 시장규모에 비해 훨씬 많다는 의견을 보였음
- ▷ 타 업역 시장규모에 비해 공사업체 수가 과다하며, 현재 공사업 진입장벽이 낮아 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
- ▷ 공사업체수가 많다고 고용창출이나 시장규모 등이 동반상승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, 페이퍼컴퍼니 양산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 균형이 균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
- ▶▶ **종합적으로, 현재 공사업 시장 내에 업체수는 과다하며, 이러한 현상과 정체를 이어 가고 있는 공사업 경기등을 정부에서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. 적정업체수를 유지를 위해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한 공사업체 등록기준 및 입찰관련 제도등을 강화(구체화)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**

나.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기준

- ▷ 현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하는 10%의 수준으로는 공사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발생하는 부실공사 및 공사물량부족에 따른 공사업 경영 등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므로, 이를 위해 공제조합의 출자기준을 현행기준보다 강화해야 하며 유사업종인 전기공사업(등록기준 자본금의 25% 수준 출자)정도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됨
- ▷ 특히 출자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시공능력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공사업 등록 시 단순 등록 기준만을 제출, 유지한 후에 입찰수주만을 추구하고 낙찰 후에는 일괄하도급으로 공사를 이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시공품질이 조금씩 저하됨
- ▶▶ 업체수 과다에 따라 발생하는 과당경쟁, 부실공사 양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기준 상향 조정 및 적용대상 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며, 재정능력을 갖추고 건전하게 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정보통신공사 시장에 존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되어야 함

다.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및 신기술제도 관련

- ▷ 2014년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국내 시장규모는 13.6조원이며 그 중 해외진출 규모는 1.9% 수준에 불과한 시점에서 공사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'글로벌 진출 역량강화' 는 중요한 이슈로서 언급됨
- ▷ 현재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진출은 가능하지만 실제 공사는 중소기업이, 대기업은 관리만 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가 대부분
- ▷ 타국에서도 공사업 관련 협력업체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사업체가 진출하기가 쉽지 않으며, 현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외에 해외공사수주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부나 공사협회 차원에서 해외 공사정보나 물량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이나 제도를 마련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
- ▶▶ **중소기업도 자생적으로 해외 진출 가능토록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하며, 역량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등 인식 개선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한 시점**

- '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' 는 공사업의 최근 현황과 공사업을 둘러싼 시장, 기술, 정책 환경 분석을 하였고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최근 5년간의 변화추이와 함께 제시
 - 시장 측면에서는 새로운 융합환경으로 인한 변화 준비를 통해 업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, 기술 측면에서는 기가인터넷 출시, 5G시대 도래에 힘입어 신기술 창출에 따른 공사업의 물량확대로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
 - 정책 환경 관점에서는 2016년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연초에 이루어질 전망이며, 재난망·공중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공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어 이와 연계된 정책 및 제도 개선·확립이 필요
- 향후 정보통신공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시공기술이 업체의 경쟁력이 되는 '기술전문산업' 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단계의 축소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 공사업체가 건설업체와 대등한 지위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제도 활용도 권고해야 함

- 하도급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불공정 행위 부분은 전년 대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, 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중요발주기관의 불공정성에는 여전히 많은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
 - 정보통신공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재조정되어야 하며, 정보통신공사업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제도와 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인식전환 및 적극적인 지원 방안 모색해야 함
-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가 재조정되고 기존의 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 가능토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 또한 개선해야 함
 - 주요 공사업체 실무진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문에 필히 반영해야 할 이슈나 사안을 모색하고, 해당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업체 종사자들이 응답하기 편하며, 쉽게 이해 가능한 설문문항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설문조사 개선(안) 필요

※ '2015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연구' 보고서를 열람하고 싶으신 분은 리포트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